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환경 선진도시와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기대하며...”



김 종 천 의원  
(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 \*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장 · 교육감과의 일괄질문 · 답변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 김종천 의원

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영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153만 대전시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음폐수 처리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모색 그리고 현직교사 불법과외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 진로변경 전입학 제의 추진경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이 그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데 보탬이 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일명 “클린넷 시스템”이 지난 2012년 4월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쓰레기 집하장 3곳과 수송관로, 투입구 465개 등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설비라고 대대적인 시정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대전시와 자치구 그리고 도시공사 간에 운영주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운영주체를 두고 시와 자치구 실무진이 지난 수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이 유발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시민들께서는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안신도시 클린넷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시설의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이유가 명확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판교, 파주, 아산, 김포 등에서 본 시설을 운영해본 결과 각종 악취 및 소음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 불만도는 높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패사례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에서 무조건 성공한 시설이라는 말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본 결과이며 이는 우리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인 판교시의 기술진단 용역자료에 의하면 클린넷 운영 시 음식물쓰레기의 이송 효율이 30% 가까이 떨어지며, 51%의 음식물쓰레기가 배관에 붙어 있다가 생활쓰레기가 혼입되면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었고 소각장 반입쓰레기의 함수율이 설계 기준치인 45% 보다 높은 7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판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기술진단을 의뢰해본 결과 시설보완을 위해 200여억 원을 더 투자해야 기술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산고 끝에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도록 합의를 이뤄 내달부터 유성구와 서구에서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타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매년 추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타자치구와의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크나큰 갈등 요인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시설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타자치구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1980~1990년대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복도 통로 중간에 쓰레기투입구가 있어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어 낙하시켜 집하시키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로 더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아무리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며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클린넷 시스템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나 국내에서 성공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향후 파생되는 행정적 부담을 미루어 판단할 수 없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폐수 하수 연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고자 2011년 「해양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년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기준 1일 476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여 톤이 퇴비로 재활용되고 하루 360톤의 음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음폐수 처리문제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육상처리에 나서고 있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육상처리는 “미봉책”일 뿐이지 음폐수 처리 대책이 될 수 없고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까지 자원순환단지 내에 음폐수 에너지화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음폐수 처리가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처리계획 및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전하수처리장에서 동절기에 60톤의 음폐수를 처리해 왔고, 미생물의 활성화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음폐수 발생량의 최대 52%인 190톤까지 단계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 음폐수 육상처리가 한고비 넘긴 것 같지만 실제로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은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성상을 살펴 보면 BOD가 5만~15만ppm, 총인의 경우 289ppm, 총질소는 1,736ppm 정도로 유입량에 비해 총인과 총질소의 농도가 매우 높고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의 오염물질처리 설계기준이 BOD 176.1ppm, 총인 5.3ppm, 총질소가 41.6ppm임을 감안하면 설계기준의 수십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겠다는 대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칫 음폐수를 처리하려다가 기존 저농도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계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계처리 방식으로는 음폐수를 균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발생 음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민간처리시설에 의존함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입찰 때마다 민간처리업자의 처리비용인상 요구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그때마다 쓰레기 대란과 민원발생 우려로 민간처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의 오염도에 대한 정밀한 유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음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의 BOD, 총인, 총질소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들이 기존 하수처리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하수처리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하수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처리대책은 마련해 놓았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수거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해법이 빨리 나오지 않는 한 153만 대전시민의 불편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갑천 A구역의 총인 목표수질 및 삭감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2013년 9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인 갑천 A에도 총인이 관리대상물질로 추가되어 환경부에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인에 대한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우리 시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기간 내에 삭감량에 상응하는 개발할당량을 부여받아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수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느냐의 양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과학단지, 택지개발, 도안신도시 호수공원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전시에서 확보한 개발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당량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대전하수처리장과 대덕산단 폐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어서 추가적인 총인 삭감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가동 중인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목표수질도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의 개발할당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기간 내 우리 시의 총인삭감계획과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염홍철 시장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과 존경하는 한근수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집하시설 자원순환단지조성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또 많은 특허와 기술이 난무하고 있는데 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상당히 부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변이 얼마만큼 확실한지 의문을 제가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서는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운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한 가동중단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금년부터 시작되는 음폐수 해양 배출 금지와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시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셔서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동집하시설 운영 주체를 두고 시와 자치구 간에 왜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보고 언론을 보면 시·구 의견이 좀 달라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소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설은 기존 쓰레기 수거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시설이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므로 자치구에서 시에 특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운영비 지원 방식에서 시와 구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는 교부금으로, 자치구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달라, 상호간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소되고 지금까지는 교부금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시의 입장임을 먼저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자동집하시설은 이미 시행 중인 판교 등 신도시의 경우 기존 수거방식보다 효율성이 낮고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간다는 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판교, 김포 등 그 이전에 설치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보완한 최신 시설로 설계시공되어 우리가 설계시공한 시설은 과거 판교나 김포의 시행착오랄까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수거방식의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친환경 설비로서 효율성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비용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하시설 운영 자치구와 타자치구의 시비 보조금 지원 관련 형평성에 대한 해결 방안,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으로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개선된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자동집하시설 운영상의 문제를 들어서 현 상태에서 가동 중단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시설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고 또 성능검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4월 도안신도시인 유성 지역부터 일반쓰레기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는 유성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또 7월 중순부터는 서구지역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정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음폐수에 대한 정밀한 유입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 발생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금지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고 2011년 10월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시행 전 1일 486톤에서 시행 후 439톤으로 49톤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 1개소와 민간처리시설 3개소에서 퇴비화와 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과정에서 약 60%의 음폐수가 발생합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현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완공이 201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전까지, 우선 금년부터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폐수에 대한 반입기준을 2012년 12월에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하수처리장의 반입 방류수 수질기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폐수에는 고농도의 BOD 또 총인, 총질소 및 음폐수의 난분해성 유기화합물로 인해서 기존 하수처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쳐 하수처리 대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수 연계 처리 시 방류수 수질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음폐수는 수처리 계통이 아닌 오니처리 계통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반입되는 음폐수는 소화조에 투입하여 상당 부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상등수만 수처리 계통으로 처리하고 수처리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음폐수가 고농도이나 유입되는 하수량에 비하여 미미한 양으로 인해 오염부하량은 총질소의 경우 전체 부하량의 0.9% 정도입니다.

BOD와 총인은 혐기성 소화와 약품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총인의 경우 2011년 6월에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폐수로 인해 하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라 미생물 활동이 둔화되는 동절기의 경우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한 후 하수처리장 수질 여건이 개선된 후에 연계처리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처리가 가능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신일동 소각장에서 일정량을 소각처리하여 음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량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총 400톤 규모의 음식물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까지 완공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기간에 우리 시 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의 목표수질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2013년 10월경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3단계의 경우 그동안 관리되어 오던 BOD 항목 외에 금강 하류지역의 총인 항목 추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미 총인 삭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이 이번 목표수질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갑천 A구역의 총인 목표수질 강화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장의 목표수질 강화, 하수의 하천 유입 방지 저류조 설치, 하수처리 구역 확대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계획 중인 제3단계 기본계획에 우리 시 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할당량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 김종천 의원

다음은 교육감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과외 재발방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 기관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에 빛나는 대전시 교육청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중순 현직교사 불법과외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대전의 A사립고등학교 B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3학년 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자신의 집에서 불법과외 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특별반 학생들을 위해 외부 강사까지 초청해 고액 과외수업까지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학교 측이 관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B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서둘러 B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관련 법률상으로도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현직 교사의 소명은 영리를 취하지 않고 참스승의 길을 걷게 하자는 사회적 징표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교사 개인만의 부도덕한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교원의 총체적인 복무관리를 맡고 있는 교육당국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건으로 지난달 시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감사결과와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변경 전입학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란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계열변경 전입학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13년 처음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해 연 1회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방송통신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방송통신고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업의 중단없이 학적을 옮기는 제도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줌으로써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을 제로화하겠다는 교육청의 확고한 방침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당초 취지대로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 전입학을 희망한 학생들의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고2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고에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고작 1명이었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희망한 학생은 100명 선에 달했습니다.

고1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6명, 특성화고에서 방통고로 2명,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214명 등 총 222명의 신청학생 중 대부분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 신청이 대부분이어서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는 무색해지고 진로변경 전입학제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학습부진학생을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꼼수라는 오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로변경 전입학을 시행할 경우 전문교과 미이수 문제 등이 발생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와 관련하여 시행 첫해의 추진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염홍철 시장과 김신호 교육감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신호 교육감

존경하는 김중천 의원님, 우리 학생들과 대전교육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직교사 불법과의 특별감사 수감결과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육공동체 모두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현직교사의 불법적인 개인과의 교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해당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201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현직교사가 3학년 재학생 3명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개인과의 교습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학교에서는 유명한 학원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일부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수학과목 특별교습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엄정한 감사결과 불법사유가 분명히 드러났음에 따라서 불법과외 교사 및 외부강사를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법인에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현직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해서 개인과외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번 불법과외 사례를 적발한 즉시 ‘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각급 학교에 2013년 6월 14일 발송하였고 지난 6월 27일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집하여 불법과외 근절 및 교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공직자로서의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감찰 기능을 확대해서 학교 내 불법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복무규정 위반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진로변경전입학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진로변경전입학제 시행의 첫해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변경의 기회를 확대해 줘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창안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첫해 시행결과 고등학교 1, 2학년 총 320명이 전입학 신청을 하였고 그 중에 20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전입학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희망한 학생이 308명인데 그 중에 192명을 배정하고 116명은 미배정했는데 그것은 희망하는 학교의 수용여건이 불충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한 경우는 6명이 희망해서 6명 모두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방송고로 전학을 원한 학생은 3명 희망했는데 3명 전원 배정했고요, 특성화고에서 방송고로 전학 희망한 학생은 3명인데 3명 전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희망학생이 320명인데 배정을 204명하고 116명은 수용여건 미비로 인해서 미배정했습니다.

진로변경전입학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결과 고등학교 학업 중단학생이 현재 전년에 비해서 1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시행결과를 보고 받고 이 제도를 획기적 수범정책사례로 선정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반화 하도록 권장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던 바 시행상 일부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어 이미 개선책을 마련 하고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할 시 미이수 과목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개의 해당과목을 충남기계공고,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대전여상 등 8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개설하고 학생들이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고 간 전입학의 경우에도 약간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전입학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 탄력적 운영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다시는 미이수 과목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진로 변경전입학제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전기술정보학교로 전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1, 2학년 대상 143명을 선발했고 8월 말에는 전입학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입학 후에도 새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진로캠프를 개설하여 연수시키고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지속적인 1 대 1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진로변경전입학제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학습부진학생을 밀어내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서 걱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교육자로서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선택과 변경의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해서 학교탈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이 강하고 호불호가 분명하기 때문에 호불호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입학 당시에 강제 배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진로변경 전입학제로 인하여 행복하게 학교를 다시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서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데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일반계고로 강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본인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최근에는 우수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모든 학생에 대해서 학비가 전원 면제이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직업을 갖고 보수도 훌륭하며 대학 진학의 문호와 해외유학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문호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어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보완을 통해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절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